

“동거로 욕구 충족되면 결혼 뭐하러?...의무만 늘어 싫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 56.4%

‘결혼 해야 한다’ 8년 간 64.7%→48.1% ‘뚝’

“집안일 의무만 얹혀질 뿐...특히 여성에 손해”

전문가 “미혼·저출산 지속...정책적 대안 필요”

“가정과 일 이중 부담 가속화...국가 응답해야”

“결혼 제도의 좋은 점이 뭐지 전혀 모르겠어요. 온갖 가족 행사 늘어나고 의무감만 많아질 뿐이잖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걸로 좋은 점은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이모(28)씨는 대학 시절부터 꿈꿨던 ‘이른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동거를 통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은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제도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원 신모(25)씨도 비슷한 생각이다. 신씨는 “결혼이라는 인위적인 제도는 나오지를 만들 수 있다”며 “동거는 그래서 합리적이고 결혼과 비슷한 삶을 경험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동거와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6일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남자가 58.9%, 여자가 53.9%로 평균 56.4%였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이 부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

였다. 2010년 40.5%,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0%였고 올해는 직전 조사 대비 8.4%p나 증가하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줄고 있다. 2010년에는 64.7%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절반 이하인 48.1%에 그쳤다.

특히 남자(52.8%)보다 여자(43.5%)의 비율이 더 낮은 점이 눈에 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이다.

취업준비생인 여성 김모(25)씨는 “여성 입장에서 결혼해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무만 얹혀질 뿐 전혀 이득이 될 게 없는 거래”라며 “좋은 남자를 찾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대부분 구시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오모(32)씨 또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세웠던 목표를 포기하고 주부로서의 의무에 갇힌다. 행복해보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어차피 같이 살고 싶고 보고 싶다는 정도의 목적이면 그냥 함께 살기만 해도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서 살기에는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등 금전적인 문제도 원인으로 꼽혔다.

정모(30)씨는 “동거는 혼자 살던 집에 한 명 더 끼어서 함께 지낸다는 느낌이라면, 결혼은 집도 새로 사야 하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다 갖춰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담이 크다”면서 “동거는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아도 되지만 결혼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걸 남에게 평가받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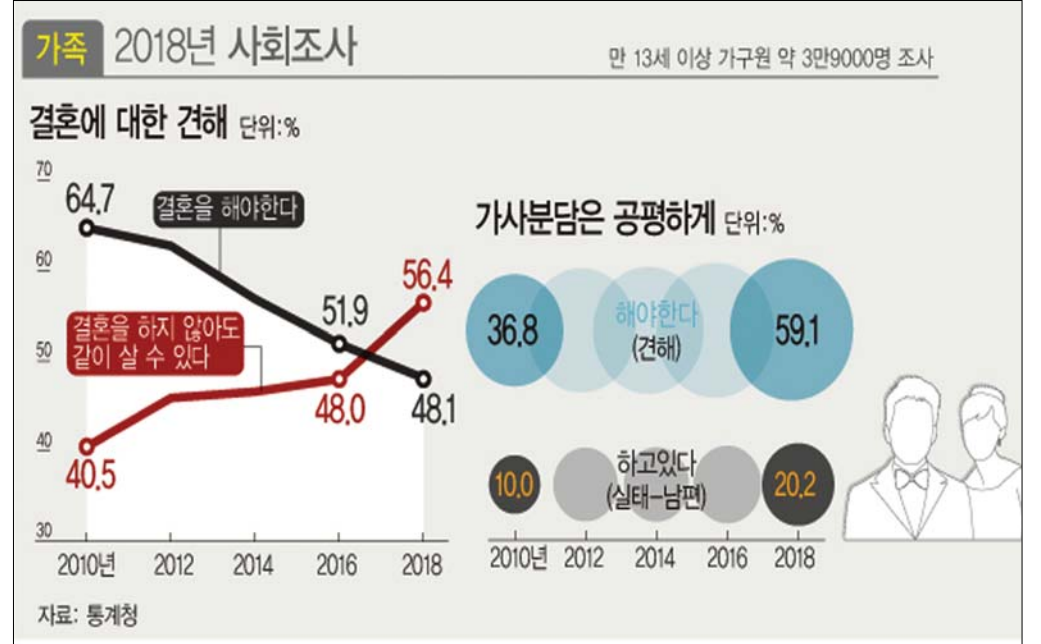
대학생 이모(24)씨 또한 “주거나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며 “결혼을 한다면 마땅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장만할 여력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쉬운 조건이 아니다”라고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그저 젊은 세대의 생각일뿐이라고 치부하기보다 사회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동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나 감성이 10대에 서부터 발견됐다는 게 놀랍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진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미혼이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히 여성들은 가정과 일에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남자들이 가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봐도 사회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여성들의 시선에 국가와 사회가 응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스



잡히지 않는 숫자...정부, 동거·조손가족 통계 파악 나설까



내년 인구총조사를 앞두고 동거가족 규모를 파악하는 항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여가부)장관은 3일 오

여가부 측은 “응답에 따라 통계가 잡히는 데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 통계 신뢰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

배우자 유무 ▲동거 유무 ▲배우자 사망 유무 ▲이혼 유무 등의 문항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응답률이 매우 낮아 결과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민약 동거라는 부분에서 기분이 나빠서 다른 설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

신뢰도·응답률 낮은 이유로 조손·동거가족 통계 부재

진선미, 통계청장 면담에서 통계 방식 협의 등 나설 듯

내년 인구총조사 앞두고 동거·조손가족 통계 확보 요청

문에 통계청에서는 (동거가족 조사에 대해)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여가부)는 어떻게 하면 (해당)문항에 대해 조사하면서 도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성간 동거 뿐 아니라, 동성 간 동거, 공동체적 생활 등 동거의 형태가 그만큼 다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

가족을 한 차례 파악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만으로 이뤄진 조손가족 1만 2750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산출한 5만1852가구를 모집단으로 했으나 응답은 1만2750가구 뿐이었다.

이 보고서는 조손가족의 소득 수준은 월평균 59만7000원으로 당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55만원에 비해 6분위에 해당하고 응답자 66.2%가 손자녀 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호소했지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예산편성도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 다른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게 조손가족과 동거가족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라며 “어떠한 정책을 만들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장 면담은 동거가족과 조손가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